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520-10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해주신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혁신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기업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2. 3.

국 세 청 장

Contents_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 5
1.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6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 7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 8

Ⅱ.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9
1. 법인세 ····· 10
2. 부가가치세 ····· 12
3. 종합부동산세 ····· 13
4. 주식양도와 세금 ····· 14
5. 원천징수하는 세금 ····· 18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 19
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21

Ⅲ. 기업경영과 세무 ····· 23
1. 절세와 탈세 ····· 24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 25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26
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 27
5. 분식결산과 세무 ····· 28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29
7.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 30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 30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31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 32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 33
5)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 34
6) 시설투자 세제지원 ····· 35
7) R&D 세제지원 ····· 36
8) M&A 세제지원 ····· 36
9)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37
1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38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39
9.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 ····· 41
10.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42
1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44
1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46
13.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47
14.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48
15.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 49

Ⅳ. 세정지원 ····· 51
1.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52
2.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53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54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55

Ⅴ. 주요 세법 개정내용 ····· 57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 58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58
3.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 58
4.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59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 59
6.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60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60
8.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등 ····· 61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61
1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등 ····· 62
1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62
12.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63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63
14.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등 ····· 64
15.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 64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1.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1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국민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 소득-복지 연계제도의 정착 지원 등 복지세정 기관으로서 본격 자리매김하는 한편,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납세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국민참여와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한 일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세정 추진기반으로서의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안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을 제공하겠습니다.

-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평한 세(稅)부담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체납·송무 대응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일하기 좋은, 활력있는 일터 조성) 직원들이 납세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혁신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달 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축소하여 나가겠습니다.

✻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

-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을 활성화 하고,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납세자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년·중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지원을 활성화하여,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 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수준 향상과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사전지원'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 최소화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짧은 조사 기간 동안 회계 및 세무분야 등에 대한 지도·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탈루 혐의 시 조사 실시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Ⅱ.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주식양도와 세금
5. 원천징수하는 세금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 연도(1회계기간)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
국가・지자체		•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몰로 종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신설('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납부 · 환급세액

매출액×10%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 · 환급세액 + 각종 가산세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택	인별합산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법인 보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폐지('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연령별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80%)

• 연령별 세액공제 :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 1.부터 12. 15.까지 납부합니다.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주식양도와 세금

✻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국내주식등)

구분		과세 대상
상장주식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타자산	특정주식	•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으로 손익통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합산하여 적용('20.1.1.이후 양도분부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 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소득세법 제 118조의 2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
  -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 **세율**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5%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5%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 외)'18.1.1.이후 (중소기업) '20.1.1.이후('19.12.31.이전 20%)

- **대주주 범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157 및 §167의8)

  *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대주주 요건]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원이상	1% 또는 15억원이상	1% 또는 10억원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원이상	2% 또는 15억원이상	2% 또는 10억원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또는 25억원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원이상	4% 또는 10억원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예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확정신고)

•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 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자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부터)

✻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 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율('21.1.1.이후)

거래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세율	농어촌특별세 세율	거래되는 주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0.08%	0,15%	상장주식
코스닥시장	0.23%	-	
코넥스시장	0.1%		
K-OTC시장	0.23%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43%	-	상장 및 비상장주식

-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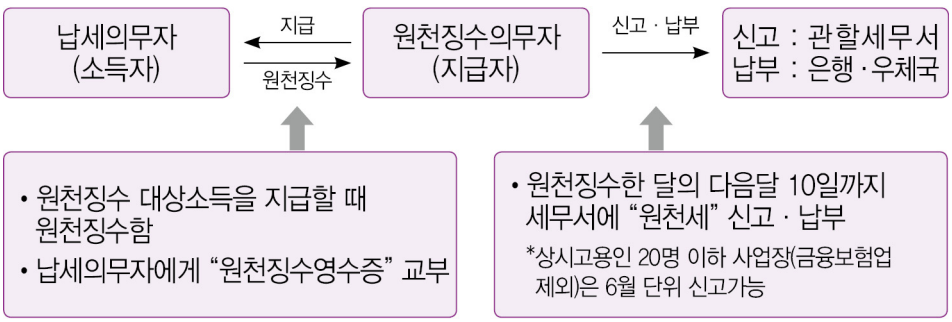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비고
한국예탁결제원	다음달 10일	장내거래(K-OTC 포함)
금융투자업자	다음달 10일	증권사 결제거래
양도자 또는 양수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주권 및 대금을 직접수수 • 주권 계좌이체 & 대금 직접수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5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 · 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 퇴직 · 이자 · 배당 · 기타 · 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그 고유번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6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개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5백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1천만원
  - (대상 확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 부동산 · 주식과 세금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 · 투자운용(임대 포함)및 처분(해외 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 · 보유 ·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 · 운용 · 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 ·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국내・해외 주택임대 관련 신고방법 비교]

<table>
<tr><th>구 분</th><th>국내주택</th><th>해외주택</th></tr>
<tr><td>과세요건
(주택수기준)</td><td colspan="2">
<table>
<tr><th>주택 수1)</th><th>월세</th><th>보증금</th></tr>
<tr><td>1주택</td><td>비과세[2)]</td><td rowspan="2">비과세</td></tr>
<tr><td>2주택</td><td rowspan="2">과세</td></tr>
<tr><td>3주택 이상</td><td>간주임대료 과세[3)]</td></tr>
</table>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또는 국내・해외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2) 해외주택 및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월세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은 '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td></tr>
<tr><td>주택임대 사업자등록</td><td>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년 귀속부터 미등록 가산세 부과</td><td>해당 없음</td></tr>
<tr><td>사업장 현황신고</td><td>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td><td>해당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td></tr>
<tr><td>신고방법
(수입금액 기준)</td><td colspan="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
<table>
<tr><th>수입금액</th><th>신고방법</th></tr>
<tr><td>2천만 원 이하</td><td>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중 선택</td></tr>
<tr><td>2천만 원 초과</td><td>종합과세(6~45%)</td></tr>
</table></td></tr>
<tr><td>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명세서 신고</td><td>해당 없음</td><td>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운용・처분 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신고 의무(6월)</td></tr>
<tr><td>가산세</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가산세액</th></tr>
<tr><td>무신고 가산세</td><td>무신고 납부세액×20%(부정무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td></tr>
<tr><td>과소신고 가산세</td><td>과소신고 납부세액×10%(부정과소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td></tr>
<tr><td>납부지연 가산세</td><td>무・과소납부 세액×납부지연 일수×(25/100,000)</td></tr>
<tr><td>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td><td>(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주택임대수입금액×0.2%(해외주택은 제외)</td></tr>
</table></td></tr>
<tr><td>「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미(거짓) 제출시 과태료</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과태료*</th><th>한도액</th><th>비고</th></tr>
<tr><td>해외부동산
(처분신고는 '19년 과세연도분부터 시행)</td><td>• (취득)취득가액의 10%
• (투자운용) 취득가액의 10%
• (자금출처)미소명금액의 20%</td><td>1억원</td><td>•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td></tr>
</table>
* '19년 과세연도 이전분은 취득・투자운용・처분가액의 1%(한도: 5천억원)
</td></tr>
</table>

Ⅲ.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5. 분식결산과 세무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5)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6) 시설투자 세제지원
   7) R&D 세제지원
   8) M&A 세제지원
   9)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1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9.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
10.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1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13.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4.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15.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1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인 보유 · 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 · 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사람

〈유지 · 관리비 및 적정임대료 여부〉

구 분	유지 · 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 · 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을 비출자 임원 ·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 · 관리비는 손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5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7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❶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❷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❹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❺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❻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❼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❽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내용</th><th colspan="2">수도권</th><th rowspan="2">수도권 이외지역</th></tr>
<tr><th>과밀억제권역</th><th>기타</th></tr>
<tr><td>지역</td><td colspan="2"></td><td>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td><td>과밀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td><td>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td></tr>
<tr><td>창업중소 기업감면 (조특법§6)</td><td colspan="2">5년간 50~100% 세액감면</td><td colspan="2">5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만)</td><td>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td></tr>
<tr><td rowspan="2">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td><td rowspan="2">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td><td>소기업</td><td colspan="2">-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20%</td><td>-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30%</td></tr>
<tr><td>중기업</td><td colspan="2">-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td><td>- 의료, 도・소매업 5%
- 상기 업종외 15%</td></tr>
<tr><td colspan="3">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td><td colspan="2">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td><td>공제 허용</td></tr>
</table>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4. 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

※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table>
<tr><th>구 분</th><th>1989.12.31. 이전 사업개시</th><th>1990.1.1. 이후 사업개시</th></tr>
<tr><td>일반기업</td><td rowspan="2">×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td><td>× (정보통신장비 등 ○)</td></tr>
<tr><td>중소기업</td><td>×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td></tr>
</table>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보전액의 15%)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5%)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5)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요 내용
신규고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3백만원(최대 3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재고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임금증대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 1천만원(중견 7백만원)

6) 시설투자 세제지원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세액
공제</td><td>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 우대
<table>
<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5</td><td>12</td></tr>
</table></td><td>■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공제율)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table>
<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5</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6</td><td>8</td><td>16</td><td>4</td></tr>
</table></td></tr>
</table>
※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td></tr>
<tr><td>기타
조세
지원</td><td>-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td></tr>
</table>

7) R&D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0~40%(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0~2%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기타 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8) M&A 세제지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9)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⑤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①~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1년 인하분 → '22.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자 보험을 말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참 고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

구 분	법 인	개인 사업자
대상 사업자	모든 법인	복식부기 의무자
제도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차량	대상 사업자가 소유 · 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ㅇ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부인 ㅇ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한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종사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가입의무 有	
운행일지 작성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초과인 경우 ⇒ 1,500(500)만원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업무사용비율: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감가상각비 · 임차료 한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연간 800(4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내용연수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의무화	
처분손실	연간 800(400*)만원까지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 부실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22년부터 적용)	

9 투자 ·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도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법인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70% −(투자금액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 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 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 × 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0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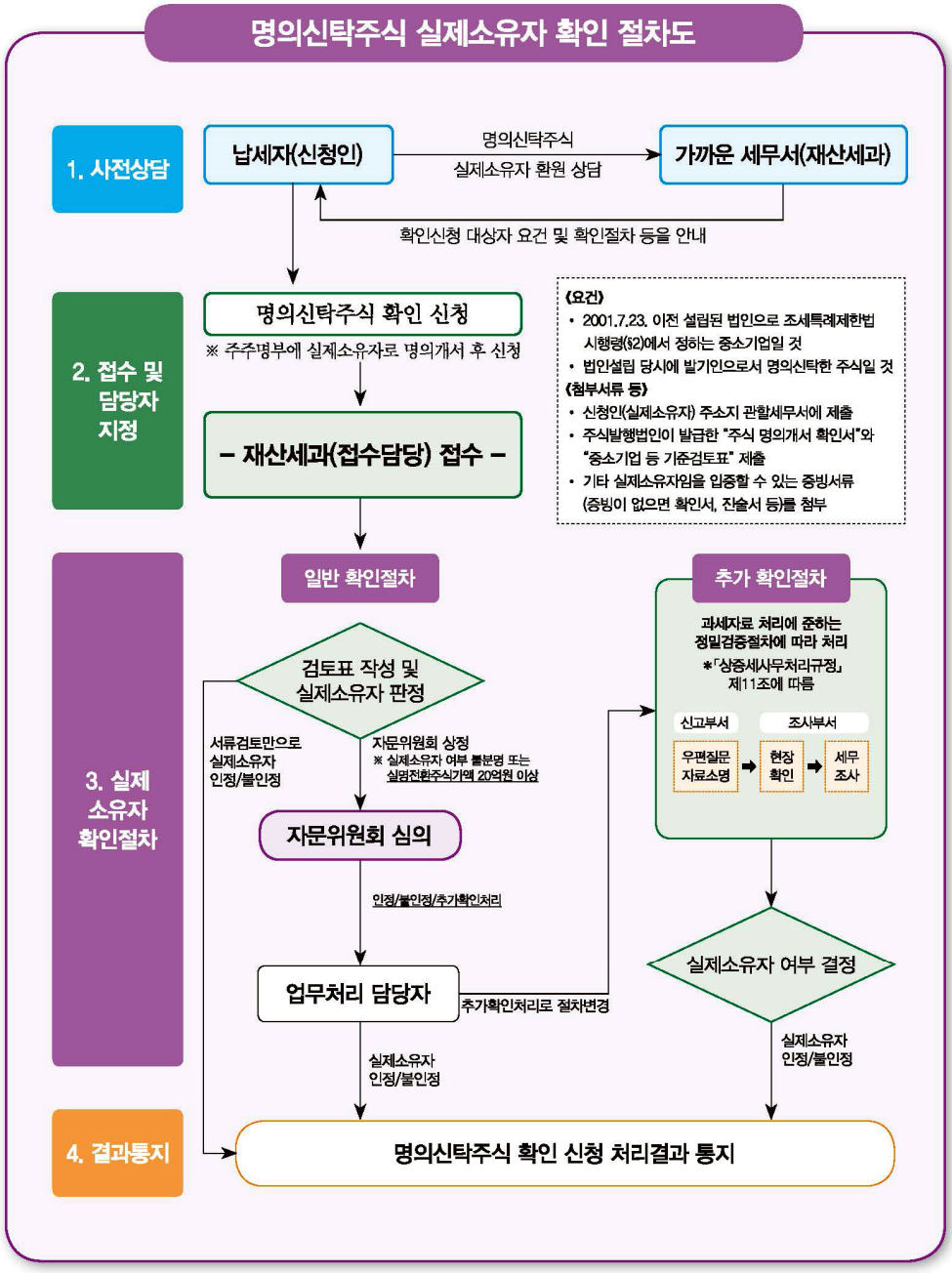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5%(20%,50%))×(주식보유비율-0%(5%,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1.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2.6.30.)

2022년 신고분,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②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40 · 50%) 초과여부 확인

① 수혜법인의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③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④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그 비율이 30%(중견 40% · 중소기업 50%) 초과 여부 확인

30%(50 · 40%)초과 ▼ 이하 → 과세제외

3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②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 · 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3%(10%)초과 ▼ 이하 → 과세제외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① 세후영업이익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중견 20% · 중소기업 50%)
* ① 및 ② 산정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times 100$$

③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견 5% · 중소기업 10%))
④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②×③)–④
–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1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1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2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3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우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하였으며,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 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신고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14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증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8년 보유분('19년 신고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 신고방법 :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6.1~6.30)
- 신고내용 : ①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금융회사명·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소명시 과태료(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20억 초과금액×15%
50억초과	6억5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20%

* 20억원 한도

15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3~35)

✻ 보고서 종류 · 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연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연간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3천만 원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Ⅳ. 세정지원

1.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2.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1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 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관련 누리집]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⑭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연구" 〉 조회하기 〉 사전심사신청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①연구개발비 명세서 ②연구개발 보고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 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제도 개요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샘플로 작성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정기·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 중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세무컨설팅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세무컨설팅' 조회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이며,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유지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체결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①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 이행법인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서 실시하며, 법인세 신고기한일까지 신청

② 협약체결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대로 이행한 경우, 해당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③ R&D 세액공제 신청시 우선 심사하고, 과세자료와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전담팀에서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Ⅴ.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3.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4.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6.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8.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등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1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등
1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12.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14.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등
15.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 · 벤처 지원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좌동)
○ 〈추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❶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❷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1%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❶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❶ (좌동)
❷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❷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 70% → 50%
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❸ (좌동)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삭제〉

→ '22.2.15.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6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식) ❶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❷통합투자 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 · 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지원내용) 신성장 · 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 · 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 · 원천기술	20~30		30~40

- R&D비용 : 신성장 · 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 · 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 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 신성장 · 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 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21.7.1. ~ '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기한요건 완화 등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 · 법인세 감면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요건) ❶ 또는 ❷ ❶ 국내 신 · 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 · 폐쇄 ❷ 해외사업장 양도 · 폐쇄 · 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 · 증설	○ (감면요건) ❶ 또는 ❷ ❶ (좌동) ❷ 해외사업장 양도 · 폐쇄 · 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 · 증설
○ (감면내용) 소득세 · 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 (좌동)
○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4.12.31.

→ '22.2.15.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8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등

■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좌동)
○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 (좌동)
○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4.12.31.

→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합리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좌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공제액)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 (좌동)
○ (적용기한) '22.12.31.	○ (좌동)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등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화하였습니다.**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청년·경력단절 여성</th><th>신성장 서비스업</th><th>기 타</th></tr><tr><td>공제율</td><td>100%</td><td>75%</td><td>50%</td></tr></table>○ (공제기간) 2년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1.12.31.</td><td>■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동)
○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 (적용기한) ’24.12.31.</td></tr>
</table>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1.12.31.</td><td>■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동)
○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동)
- 특수관계인 제외
○ (좌동)
○ (적용기한) ’22.12.31.</td></tr>
</table>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좌동)
○ (요건) ❶과 ❷ 모두 충족 ❶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❷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 (적용기한) '22.12.31.	○ (좌동)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국외 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 - 각본료, 연출료, 배우 출연료, 촬용스태프 인건비, 숙박료, 교통비 등	○ (좌동)
○ (공제제외) 국외 제작비, 광고·홍보비, 접대비 등	○ (공제제외) 광고·홍보비, 접대비 등

→ '22.1.1. 이후 개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14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등

■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 (좌동)
○ (경영성과급 요건) ❶+❷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❷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요건 완화 ❶ (좌동) ❷ 〈삭제〉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동)
○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4.12.31.

→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좌동)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좌동)
○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4.12.31.

→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이 책자는 2022년 3월 현재 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경영 관련 세무업무 중 최고경영자께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발행일자	2022년 3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감 수	법인세과장 고 근 수
집필·편집	행정사무관 유 민 희
	세무조사관 김 상 배
	세무조사관 도 영 수
	세무조사관 박 양 규

2022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모든 세금업무,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최근 국세소식은 매주 「국세청 뉴스레터」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세신고 납부 · 증명발급은 「홈택스」로
홈택스는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을 통하여 접속

국세관련 문의 ·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